

남북대화는 한국만 가진 중대한 전략적 자산이다 : 오바마 행정부 등장과 북미관계, 그리고 이명박 정부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이화여대 이화학술원 전문연구원)

- I. 오바마 행정부의 적극적인 대북외교
- II. 북미간 의사소통의 개시
- III. 북미대화와의 조화
- IV. 북핵 해결을 향한 건설적 역할 증진
- V. 경제위기 타개에 일조
- VI. 이명박 정부의 역사적 기회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으로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미관계, 그리고 그것이 남북관계와 한반도 질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 오바마 행정부 등장을 전후로 북미간 간접적인 의사교환이 제법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 국내에서는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와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 그리고 남한의 대북정책을 전망하면서 정책 전환과 현 정책 유지로 입장이 나뉘고 있다. 여기서는 정책환경 변화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일반론을 전제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북미관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거기에 조응하는 방향으로 남북관계가 변하도록 남한이 나서야 함을 밝히고자한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노선과 부합하고, 남한이 변화하는 주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남북대화를 다목적용 전략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I. 오바마 행정부의 적극적인 대북외교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을 부시 정부의 정책과 비교하며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의 주관심사인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북한의 주관심사인 북미관계 정상화 카드를 적극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이 구체화 되려면 대통령 취임 이후 몇 개월의 정책 검토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오바마 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핵문제에 초점을 두고, 완전하고 검증한 해결을 지향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위반시 국제제재를 밝히고 있는 점은 부시 행정부의 정책과 연속성을 보이고 있다. 그에 비해 그런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과 같은 적성국과도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고 “터프하고 직접적인 외교(tough and direct

diplomacy)” 를 밝히고 있는 점은 정책추진 방법상의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북한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북한과 관련하여 세 가지 언급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중 가장 뚜렷한 점은 핵위협 제거를 위해 적성국 지도자와도 대화할 것이라고 밝힌 점이다. 이는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북한의 관심사에 주목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고, 그런 자세는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는데 유용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빈곤국에 대한 지원과 압제 해방을 위한 노력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북한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식량난과 인권상황이 그것인데, 오바마 행정부가 이 두 문제를 갖고 북한에 접근한다면 미국 외교정책의 도덕성과 지도력을 과시하는 한편, 북한에게는 일관된 메시지를 주면서 당근과 채찍을 균형 있게 사용할 것임을 의미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서 우선순위로 놓고 있는 것이 에너지 안보와 함께 “핵 없는 세계” 건설이라는 점에서 북핵문제는 미뤄놓을 문제가 아니다. 또 대통령 취임과 함께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외교정책 방향은 당선 직후 내놓은 적극적인 외교적 접근을 그대로 담고 있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응하도록 체제안보, 경제지원, 관계개선 등 포괄 접근을 시도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수준과 방식의 대화를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II. 북미간 의사소통의 개시

한편 미국의 새 행정부를 상대로 한 북한의 대미정책은 신년 공동사설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지난 1월 1일 신년 공동사설에서 북한은 미국을 비판하지 않은 채 대외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행정부 교체가 이루어진 미국과 교체가 일어날 수도 있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외교’ 공세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 협상을 6자회담과 양자회담을 병행하며 외교적 접근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그의 취임 초기부터 양국간 활발한 대화를 추구할 것이다. 작년 미 대선 직후 리근 북한 외무성 미주국장 일행의 미국 방문,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에 북한 대표단의 참석 의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미국·일본과의 직접 대화 요구와 한반도 비핵화 노력 언급 등은 북한의 대미 일 관계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최근 현상들이다.

지난 1월 13일, 17일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는 오바마 행정부에 거는 북한의 기대와 핵문제에 관한 기본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먼저, 북한은 6자회담에 나가 북핵문제를 협의한 목표가 대미 관계정상화임을 밝히고 있다. 둘째, 북핵 폐기 시점을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이 없어질 때” 로 밝히고 있고, 검증문제

도 “비핵화가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단계에 가서 조선반도 전체에 대한 검증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북핵 협상을 미국으로부터의 확고하고 구속력 있는 안전보장 획득까지 끌고 갈 의향을 내비친 것으로서 오바마 행정부에 포괄접근을 요구하는 것으로 읽혀진다. 특히 1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관계정상화와 핵문제는 철두철미 별개의 문제”라고 전제하고,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게 된 것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나 경제지원 같은 것을 바라서가 아니라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발언은 13일 담화에 대해 미국무부가 관계정상화에 앞서 북핵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나선데 대한 반응이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관심사와 함께 포괄 접근할 필요성을 워싱턴에 제시하면서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북한의 대화 의지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미국 정보당국은 미국 내 정권교체기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에 주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문제가 불거져 나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이 1월 23일 평양을 방문한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왕자루이(王家瑞)를 접견하면서 자신의 견제와 비핵화 의지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미국무부는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을 환영하고,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빨리 재검토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아직 구체화 된 상태가 아니고 경제정책, 중동사태 등 다른 주요 사안들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취임 몇일 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경제문제, 외교문제에 취한 기민하고 적극적인 조치와 위 미국무부의 발언을 볼 때 대북정책이 비교적 빠르게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미뤄볼 때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문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 분명해보이고, 나아가 필요하다면 북미관계 개선과 정전체제 재편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은 북핵문제와 한반도 질서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국의 대북정책과 주변 4강 외교는 분명 새로운 정책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남북대화가 중단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는 올해도 남북관계가 “조정기”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적극적인 상황 개선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방향과 그것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새해 들어서도 남북한은 상대를 향해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태를 벗” 어라, “북남대결에 미쳐 날뛰는 남조선 집권 세력”이라는 상호 비방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기존 남북 정상간 합의는 겨울잠을 자면서 실향민의 애환은 줄어들 줄 모르고, 경제협력은 명맥만 유지하고, 북핵문제에 관한 남한의 영향력은 약화되어가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방향과 최근 북미간 일련의 구두상 의사소통(verbal communication)을 볼 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정책환경에 적응하고 미래 발생가능한 사태에 적극 대처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정부가 남북대화가 갖는 의미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남북대화를 대북정책의 수단으로 접근하지 말고 한국만이 가진 전략적 자산이라는 적극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이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Ⅲ. 북미대화와의 조화

지난 1월 13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가 9.19 공동성명에 동의한 것은 비핵화를 통한 관계개선이 아니라 바로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라는 원칙적 입장에서 출발한 것이다” 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도 북한에 6자회담과 양자회담을 병행하며 외교적 접근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북미대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북미대화의 시점에 이르면 북한은 남북대화에도 응할 것으로 보고, 그때까지 먼저 대화에 나설 의향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사실이 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한반도 정세를 되돌아 볼 때 북미관계가 대화국면에 진입한 상태에서는 남북관계와 무관하게 자가발전(自家發電) 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1994년 제네바합의 이후 남북관계 단절에도 불구하고 북미대화는 전개되었고, 1998년 김대중 정부 등장 이후에도 북미대화는 부시 행정부 등장까지 지속되었다. 이 점을 한국정부는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곤경과 외교적 고립으로 북한이 언젠가는 대화에 응할 것(사실은 이명박 정부에 고개를 숙일 것)이라는 전망은 객관적 현실을 무시한 주관적 기대에 불과해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제네바 합의 이후 고립을 자초한 김영삼 정부의 모습을 재현한다면, 그것은 이 정권의 정치적 실책에 머물지 않고 한국이 미래 한반도 질서 변화에 뒤쳐지는 후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남북대화 중단 속의 북미대화 진전은 우리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은 사태이다.

그렇다면 남한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전략적 삼각관계론에서 볼 때, 남한의 동맹국이 남한과 적대관계에 있는 북한과 관계개선에 나서는 것은 남한에게 인지 부조화 상태를 초래한다. 물론 현재와 같은 인지 부조화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한미 갈등, 국내정치적 압력 등 많은 비용을 가져올 것이다. 실용주의노선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남한은 현 상황을 인지조화 상태로 바꾸기 위해 가능한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남북대화에 나섬으로써 세 양자관계가 순방향으로 나아가는 긍정적 조합이고, 다른 하나는 현 남북 갈등상태를 지속하면서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한미 갈등이 발생하는 부정적 조합이다. 첫 번째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기에 나타났던 양상이고, 두 번째 경우

는 김영삼 정부기에 나타난 바 있다. 물론 바람직한 선택지는 첫 번째이다. 북미대화와 함께 남북대화가 이루어지면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간 정책공조가 보다 강화될 뿐만 아니라, ▷남북간 신뢰조성으로 다방면에서 상생 협력이 가능하고, ▷향후 새로운 한반도 질서 형성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행사할 기반을 가질 수 있다.

IV. 북핵 해결을 향한 건설적 역할 증진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중단시키고 구속력 있는 안전보장을 얻기 위한 것이다. 작년 말 북한이 핵신고 목록 검증문제를 내세워 비핵화 2단계를 완료하지 않은 것도 미국의 새 행정부를 상대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협상 국면을 조성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앞으로 북핵문제를 북미관계 정상화 및 미국으로부터의 안전보장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6자회담과 함께 북미 양자대화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적극적인 북핵 외교와 결합하여 북핵문제를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시킬 수도 있다. 그런 상태에서 남북대화가 계속해서 중단된다면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한국은 외교적 미아가 될 우려가 있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12월 통일부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통일부의 남북관계 전환 계획을 질타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대북문제를 풀어갈 것이며 남북관계를 어설피게 시작”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것은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 발언과 맞물려 북한의 불신을 가중시켰다. 정부는 오바마 행정부 등장으로 북핵문제가 가시적 진전을 보이더라도 과거 경수로사업과 같이 결정적인 단계에 들어서서는 남한의 역할이 부상할 것이므로, 기다리면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이명박 정부는 시간은 남쪽에 유리하기 때문에 북한에 양보를 하면서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명박 정부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다. 체네바합의 이행과정에서 남한이 경수로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남북대화 재개를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체네바합의 이후 김영삼 정부 임기 끝까지 남북대화는 중단되었고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반면에 북미대화는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다시 말해 북핵문제가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대북 경제 에너지 지원에 한국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남북대화 재개, 나아가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를 자동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핵문제 해결 없이 남북대화 없다는 인식 하에 방관 혹은 압박 위주로 접근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타당성은 물론 현실성도 없어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을

핵문제 위주로 접근하면서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경제협력, 인도적 문제 등 여타의 대북정책 사안들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을 북핵문제만으로 추진하지 않는다고 강변해도 남북대화의 모든 창이 닫혀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고, 그 책임을 북쪽에만 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욱이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창조적 구상을 북한과 관련국들에 제시하여 6자회담 사이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고 한국의 역할을 제고하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작년 12월 6자회담에서 미국 수석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동안 한국측이 회담 결렬을 선언한 것이나, 그에 앞서 한미일 대북 압력을 주도한 것은 북핵 진전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한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높이고 그 과정에서 향후 한반도 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 강화, 선린우호 외교와 함께 남북대화가 필수적이다. 남북대화가 없는 상태에서 6자회담(혹은 거기에 북미대화)을 통해서만 북핵문제가 논의될 경우 한반도 평화 문제는 외부의 힘이 크게 작용하여 한국의 역할이 축소될 수도 있다. 그런 가운데 남북간 대결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북핵문제 해결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은 물론 분단만 고착화시킬 뿐이다.

V. 경제위기 타개에 일조

남북대화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상생의 다리를 놓을 수 있다. 2008년도 남북 교역 규모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그것은 대부분 개성공단 사업 유지에 따른 것이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한 경제협력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인도적 지원과 같은 비상업적 거래는 크게 위축되어 있다. 2005-07년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가 투자 대비 3-4배에 달한다는 평가를 감안할 때 작년 개성공단 사업 결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분명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의 최대 성과는 명실상부한 남북 상생의 경험모델 창출에 성공했다는 점에 있다. 또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제협력은 경제적 효과 외에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 기여, 북한의 개혁개방 촉진, 북한 주민의 대남인식 개선과 같은 정치사회적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개성공단 사업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더욱이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 경험의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남북한은 대립과 갈등에서 상생과 공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한 것은 참으로 옳고 시의적절한 말이다. 그러나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언제라도 북한과 대화하고 동반자로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명분’을 주고 ‘실리’를 얻는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 남북간 대립 상태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뼈라 살포를 묵인하거나 북한에 “남남갈등을 부추

기는 구태를 벗”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 정권의 남북대화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현 경제 난국을 남한에 국한하여 건설 등 노동집약 분야 위주로 투자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처방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개성공단의 확대 발전과 타 남북 경제협력 분야의 개척에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반된 이 두 측면을 합쳐보면 남북 경협은 남한의 경제난국 타개와 북한의 경제회복, 곧 남북한 상생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경협은 남북한 모두에게 수익 및 고용 창출과 신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남한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는 노동집약적 산업을 북한에 넘기고 거기에 기술·정보집약적 요소를 결합시켜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경협에 임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정부 스스로 밝힌 남북간 “상생과 공영”의 발판으로 활용하는 창의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남북 경제협력은 남북한의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유력한 한 방안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통일을 대비하는 남북 경제공동체 수립에도 유용할 것이다. 작년 남북 경협이 상업적 거래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1% 상승하였다고 하는데, 반면 북한과 중국의 교역은 20% 증가하였다. 중국이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에 깊이 관여하고 있고, 신의주-단둥 일대에 양국간 경제 특구사업이 검토 중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두만강 접경지대를 포함해 북한과 러시아 간 경제-에너지 협력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오바마 행정부도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유인책으로 대북 경제 지원 및 교류, 북한의 국제경제활동 지원에 나설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는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핵을 포기할 경우 받게 될 인센티브와 이를 거부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종합적인 ‘조합’을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압력 위주의 부시정부의 대북정책과 대조적인 것으로서 오바마 행정부의 “터프하고 적극적인” 북핵 외교를 뒷받침해줄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은 북한과 일본의 수교 협상을 촉진하고 중단된 양국간 경제 교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런 주변국들과의 경제관계 증진이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에 자연스럽게 기여할지는 의문이다. 북한의 경제회복은 북한의 체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 그것은 남북 대결상태를 지속할 수도 있다. 이때 남한의 선택은 북한의 대외 경제관계를 억제하거나 경제협력을 활성화 하는 것, 그 둘 중 하나이다. 남북간 신뢰를 조성하고 남북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관점에서 남한이 전략적 판단은 분명하다.

VI. 이명박 정부의 역사적 기회

국제협력을 표방한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은 핵문제를 관계정상화와 병행하여 완전한 체제생존을 추구하고 있는 북한에게 기회로 다가갈 것이다. 이때 남한변수는 북한에 이차적일 수 있지만, 대미관계 발전을 위해 반드시 악화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문제를 활용해 대미 접근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남한은 이점을 활용하여 비핵화, 북미관계, 남북관계의 선순환적 발전을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남북을 ‘사실상의 통일’ 상태로 진입시키는 대전략을 준비할 때이다. 그런 점에서 남북 대화 중단은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노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역동적으로 변해나갈 한반도 정세에 한국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데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고개를 숙이고 남북대화에 나설 날을 기약 없이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남북관계를 주도해가야 할 것이다. 남북대화는 북미대화와의 조화, 북핵문제에서 한국의 역할 증대, 남북 상생의 기회구조 형성, 남북간 신뢰 조성 등을 추진해나갈 발판이다. 이처럼 남북대화는 한국만 갖고 있는 전략적 자산으로서 다목적 의미를 가진다. 이런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 남북대화를 북한과의 기싸움 수단으로만 잡고 있을 여유가 없다. 이제 이명박 정부가 6.15, 10.4 남북정상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할 의사를 밝혀 북한을 대화의 장에 끌어내고, 다각적인 실리를 추구할 시점에 이르렀다. 말하자면 이명박 정부는 자주 오지 않는 ‘역사적 기회’ 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2009/01/28)

※코리아연구원은 회원님들의 정성어린 후원회비 및 기부금으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 부문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홈페이지(www.knsi.org)와 전화(02-733-3348)로 후원 및 회원등록이 가능하며, 후원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